

“출마는 ‘신중’… 세월호 특별법, 책임지고 쟁길 것”

〈6·13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 인터뷰 |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비교적 선명해 보였던 전남지사 선거 구도가 현역 출마 여부, 정당 지형 변화 등 변수들로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다. 특히 탄탄한 지역 지지 기반을 뒀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지면서 각 정당으로 후보군이 헤쳐모였다. 국민의당 시절 출마가 점쳐졌던 박지원·주승용 의원은 각각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선 뒤 선거 행보가 다소 주춤해졌다. 주 의원은 아예 출마 뜻을 접었다.

본지는 최근 민주평화당 박지원 국회의원(목포)과 인터뷰를 가졌다. 박 의원은 최근 뇌종양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부인의 병간호로 인해 ‘금귀월래’(金歸月來·금요일에 지역구 내려와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돌아온다 는 뜻)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도지사 출마 의중과 전도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전남 진도 출신인 박 의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전남도지사 후보군 중 한명이다. 먼저 전남도지사 출마 여부를 물었다. 그는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언론도 전망을 묻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그러나 진도군을 포함한 전남 발전, 호남 발전을 위해서 정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인지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

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섬의 날이 지정됨에 따라 도서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관광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이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총 3348개의 섬 중 472개의 유인도에 86만317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며 “섬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해양환경의 보고이고, 미래의 잠재성장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했다.

고령화 저출산 등의 여파로 전남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3.9% 증가했지만 진도군을 포함한 전남 서남권 인구는 오히려 2.5% 감소했다”며 “진도, 전남에 대한 SOC 투자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인 진도군의 군정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진도군은 전남 17개 군

전남 인구 감소… 정부, SOC 투자 필요
정부 국정 운영 ‘긍정’ 평가… 협치 주문
남북 관계 개선 국면 “경험 적극 지원”



박지원 의원

(郡)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1위로 확보했다”며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이동진 군수와 군 관계자 여러분, 윤영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의 노고,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민주평화당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달 20일 국회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그는 “만시지탄이지만 저

와 윤영일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주도해 왔던 책임을 끝까지 지고 진도 어민들의 피해 지원과 진도 발전을 위해서 꿈꾸하게 쟁기도록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적폐청산과 감동적인 인사를 하고 특히 남북관계를 풀어 가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치하고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개선 국면에 접어든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결국 북한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저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진도군 세월호 선체 보존… 찬성 하십니까”

안산시 대부도·진도군 등 8곳 검토
선조위에 선체처리계획 자료 요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가 선체 직립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목포신항에 거치된 선체를 바로 세운 뒤 미수습자 5명의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선체의 보존 장소 및 활용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선체 보존 후보지로 안산시 대부도 등 8곳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은 선조위측의 용역과 군민여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선체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유가족 및 관련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거치 된 지 316일 만에 부두와 수평 방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오는 5월 31일 바로 세워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현재 선조위는 선체 보존 방안으로 ▲원형 보존(선체를 원형 복원해 교육관·기념관·전시관·체험관으로 활용) ▲일부 보존(선체 일부분을 활용해 전시관·기념관·교육시설로 활용) ▲상징물 활용(선체 주요 설비와 부품들을 기념물 및 추모 상징물로 활용) 크게 3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선체를 보존할 후보지로는 안산시 대부도 해양안전체험관과 화랑공원, 인천시 안전체험관(후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과 진도항 매립지, 제주도 도민안전체험관, 목포시 고하도 용머리 인근 등 8곳이다.

선조위는 지난 1월 말 세월호와 관련이 있는 안산시, 인천시, 진도군, 목포시, 제주시 등 5개 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선체 수용이 가능한 부지 현황, 선체 수용 시 활용 계획, 선체 수용 시 부담할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10년 답보 ‘수원영화도시’ 개발 무산되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10년 넘게 끝으로 남아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문 인근 영화도시개발지구(관광지구) 개발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계획 기간이 올해 말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낮은 용적률 등으로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4일 경기관광공사와 수원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04년 화성 장안문 동쪽 부지 2만500여m²를 화성 관광의 거점으로 공동 개발하기로 협약한 뒤 2005년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도 및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거쳐 2007년 경기관광공사가 사업 부지 중 1만3천800여m²를 265억원에, 수원시가 6천600여m²를 100억여원에 토지주들로부터 매입했다.

두 기관은 민간기업 등을 참여시켜 이곳에 관광공사 사옥과 화성관리사무소를 포함해 다양한 관광 관련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사업 참여 희망 민간기업을 공모했으나 무산됐다. 사업부지가 문화재인 화성 성곽에 인접해 있어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데다가 용적률도 200%로 제한돼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업부지에서 문화재 등이 출토될 가능성이 커 건축 행위 등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민간업체 참여의 걸림돌이 됐다.

경기관광공사와 시는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려고 지난해 말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 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10개월 사이에 민간기업 참여 유도 등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착공이 어려워 이 지구 개발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우리도 함께해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5주년 “더 좋아졌네~”

광주와 전남의 진산(鎮山)인 무등산이 4일 국립공원 승격 5주년을 맞았다.

광주 동·북구와 전남 담양·화순에 걸쳐 있는 무등산은 2013년 3월 4일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4천 12종 생물자원의 보금자리로 확인됐다.

도립공원 당시 조사된 2천296종보다 약 1.75배 늘어났다.

최근까지 시행한 자연자원 종합조사 결과 무등산에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생물은 모두 25종이다.

1급 멸종위기종 수달과 상제나비, 2급 멸종위기종 담비·삶·하늘다람쥐·독수리·산작약 등이 무등산에 터를 잡았다.

천연기념물은 도립공원 당시 9종에서 현재 13종으로 늘었다.

자연경관인 주상절리(465호)는 팔색조(204호), 올빼미(324-1호), 수리부엉이(324-2호), 소쩍새(324-6호) 등 생물자원과 함께 무등산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로 꼽힌다.

무등산 전체 면적은 국립공원 승격 이후 30km²에서 75km²로 약 2.5배 넓어졌다.

용도지구별로 공원자연환경지구 63km², 공원자연보존지구 10km², 공원마을지구 1km², 공원문화유산지구 0.7km², 공원집단시설지구 0.3km² 등이다.

광주 도심에서 자작인 무등산을 찾은 누적 탐방객 수는 국립공원 승격 이후 지난 해 말까지 1천848만1천777명을 기록했다.

해마다 350만명을 상회한 탐방객 주세를 미뤄볼 때 151만여명 남겨둔 2천만명 돌파는 올해 이뤄질 전망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날 많은 비가 예보된 날씨를 고려해 별도 기념행사 없이 국립공원 승격 5주년을 차분하게 맞기로 했다.

정장훈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에 걸맞은 품격과 위상,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